약 10여만 권의 초판본이 모여 있다. 수많은 초판본과 창간호를 아카이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그를 만나 처음이

가지는 의미를 들어봤다.

교양과목 절대평가 시행 현황 | 3면 뉴스

제55대 총학생회 '스케치'의 주요 공약인 교양과목 절대평가 논의 과정을 짚어봤다.

제 1714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

## H O 二个

## 투표율 미달 개표·당선 무효, 논란의 학생회 총선거

박상희 기자 smtg7475@khu.ac.kr 서나은 기자 merlo@khu.ac.kr

양 캠퍼스 학생회 총선거가 마무 리됐다. 하지만 양 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선거 시행세칙 위 반, 후보자 징계와 당선이 무산되는 일까지 발생했다.

국제캠 응용과학대학(응과대) 학 생회 선거에서 투표율이 과반을 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표가 진 행됐다. 응과대 학생회 투표율은 50.0%(총 유권자 430명 중 215명 투 표)를 기록했고 [이-음] 선거운동 본부(선본)가 95.81%의 찬성 득표 율로 당선됐다. 우리학교 총학 「선 거 시행세칙」 48조 4항에 따르면 투 표율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경우엔 투표를 연장하고, 연장된 투표 마지 막 날에도 투표율 미달이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.

이에 우리학교 커뮤니티 에브리 타임(에타)를 중심으로 '응과대 투 표 처음부터 다시 해라' 등 논란이 일었다. 우리신문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(중선관위) 권예성(건축공 학 2018) 위원장에 개표 진행 이유 를 듣기 위한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 변을 들을 수 없었다. 응과대 소속 A 씨는 "투표자가 과반이 넘지 않 았는데도 개표한 건 투표의 공정성 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"고 전했다.

서울캠에선 생활과학대학(생과 대) 선본의 이미지 파일 미제출로 인한 과잉 징계 논란, 호텔관광대학

(호관대) 정후보의 선거 시행세칙 미준수와 선거 이후 이의제기로 인 해 당선이 무효됐다.

생과대 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 는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후 보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을 공식 SNS 계정과 벽보에 게재 했지만, 생과대 공식 네이버 카페에 게재된 선거 시행세칙엔 해당 사항 이 존재하지 않았다. 그 결과, 생과 대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총 5개의 선본 중 1개의 선 본(아동가족학과 윤슬 선본)만 이 미지 파일을 제출했다.

이후 선관위는 이미지 파일 미제 출 선본에 후보자 등록 불허 조치를 내렸지만, 네이버 카페 선거 시행 세칙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이의 제기를 접수해 해당 선본의 선거운 동 전면 금지와 A4 한 장 분량의 자 필 사과문 작성을 결정했다. 사과문 은 생과대 1층 로비 및 공식 SNS에 게시됐으며 SNS에는 무기한 게시 됐다. 다만, 징계가 과하다는 비판 이 나왔다. 생과대 소속 A 씨는 "선 거운동 전면 금지는 조금 과하다" 고 말했다. 또한 에타에는 "이미지 파일 하나 제출 안 했는데 선거 유 세 전면 금지에 사과문 무기한 게시 는 낙선하라는 게 아니냐"는 의견 이 올라오기도 했다.

생과대 이도윤(식품영양학 2022) 선관위장은 "이미지 파일을 제출하 지 않은 선본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이 나왔다"며 "과한 징계였다는 점



이미지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네 개 선본의 자필 사과문이 생활과학대학 1층 로비에 게재 (사진=이지수 기자)

을 인정한다"고 밝혔다. 이재백(관 광학 2020) 중선관위장은 "생과대 선관위는 시행세칙보다 공고 기준 으로 징계를 내린 것 같다"며 "선거 공고와 시행세칙을 동일하게 했어 야 한다"고 말했다. 이어 "이미지 파 일 미제출은 소통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"고 덧붙였다.

호텔관광대학(호관대)에선 후 보자의 시행세칙 미준수 및 징 계, 당선 무효가 발생했다. 호관대 [SURF] 선본 김민규(외식경영학 2022) 정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선관 위 SNS 무단 사용, 후보자 및 선본 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두 차례 경고 징계를 받았다.

김 정후보는 제48대 호관대 학 생회 대외협력국장이라는 전 지 위를 이용해 선관위 계정에 접속 했다. 또한 선거기간 내 후보자 및 선본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Hospitality 경영학과, 외식경영학 과 두 개의 과방 컴퓨터 파일에서 발견됐다. 김 정후보는 이후 사과문 을 게시했다.

이러한 논란에도 김 정후보는 호 관대 학생회장에 당선됐다. 하지만 선거 이후 닷새 동안 진행된 이의제 기 기간에 ▲김 정후보의 단과대 학 생회 구글 드라이브 상시 로그인 ▲ 허가받지 않은 선거 현장 독려 ▲선 거운동 기간 이후 유세 ▲선본 SNS 계정 삭제 미실시 내용의 이의가 접 수됐다.

관련 논의는 지난 5일, 호텔관광 대학운영위원회(관운위) 회의에서 진행됐다. 논의 결과 이의제기 사 항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고, 총인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해 찬성 7, 반대 0, 기권 7로 가결됐다. 이후 선거 무 효안건이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상정됐다.

호관대 선거 시행세칙 제40조 2항 은 이의제기가 인정될 때 재적인원 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 무효 안건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상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. 하 지만 논란은 회의 참석 인원 중 찬 성이 2/3를 넘지 않았음에도 가결 됐다는 점에서 불거졌다.

김 정후보는 "이점에 의문을 갖고 호관대 선관위장에 문의했는데 기 권 표와 관련한 회칙이 부재해 의결 이 어려운 경우, 상위기구인 중앙운 영위원회(중운위) 방식에 따라 기 권 표를 제외한 찬/반의 비율로 의 결을 진행해 왔다는 설명을 들었 다"고 전했다. 논란의 지점은 이뿐 만이 아니다. 관운위는 회의 안건이 '이의제기가 정당하다'인지 '정당하 지 않다'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 았으며 투표가 기명으로 진행됐는 지, 무기명으로 진행됐는지도 불분 명하다

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호관대 민솔(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1) 선 관위장에게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 했으나,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. 선 관위는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호관 대 공식 SNS 계정에 "의결에 앞서 상위기구인 중운위의 의결 방식을 채택했으며, 해당 투표 의결 시 기권 표는 '이견 없음'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 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 었다"며 "결과 해석에 여러 혼선이 발생할수 있음을 간과함에 사과드린 다"는 입장문을 게재했다.

이후 지난 7일 전체 학생대표자회 의에서 이의제기에 따른 당선 무효 심의가 진행됐고, 찬성 16표, 반대 7 표, 기권 6표로 가결돼 김 정후보의 당선은 무산됐다.

## 총장 예비 후보자 10인 5인 압축 예정

이지수 기자 ssu1404@khu,ac,kr

지난 7일 기준, 총장 예비 후보자 10인이 선정돼 총장후보숙의위원 회(총숙위) 단계에서 숙의·자문 과 정을 거치고 있다. 총숙위가 예정대

로 11일 월요일까지 총장 후보자 5 역 등의 기본 이력과 함께 추천 사 인을 선정하면 후보자 5인은 바로 이사회로 전달돼 최종 선임 단계를 거치게 된다.

행정지원단(단장, 권오병 학무부 총장)에 따르면, 11월 1일(수)부터

15일(수)까지 진행된 '초빙·공모'를 통해 총 39명의 총장 후보자가 추천 됐다. 이중 총장 후보직을 수락한 인원은 15명으로 알려졌다. 각 단체 별 5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 원회(총추위) 위원들은 학력 및 경 유 등을 근거로 총장 예비 후보자를 추천하는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. 총장 후보자는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포함됐다.

15인 중 총추위에 선발된 총장 예

비 후보자는 10인이다. 총숙위 숙의 위원이 숙의와 자문을 통해 총장 후 보자를 5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. 총숙위는 이사 4인, 이사회 추천 전 으로 구성됐다.

원 소통 역량, 전환·혁신의 리더십 역량, 조직관리 역량 등을 검토하게 된다.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5명 의 후보는 바로 이사회로 전달돼 총

장 최종후보자 선정을 거쳐 최종 선 임 될 예정이다.

행정지원단은 지난 7일, 전체 구 성원에게 송부한 공문을 통해 "후 문가 1인, 구성원 추천 전문가 4인 보별 상세 이력서와 후보별 역량· 경험 등 업적 소개서, 후보별 자기 총장 예비 후보자의 총장상 부합 점검리스트,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도, 업무 수행 적합도, 이사회·구성 결과보고서,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공 자료 일체를 총숙위에 제공했 다"며 "이후에도 단계별 진행 상황 을 구성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 겠다"고 밝혔다.